

우리나라와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제*

심 재 한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목 차 >

- I. 소비자신용의 기능
- II. 상품의 판매와 결합된 소비자신용
- III. 현금금융을 통한 소비자신용
- IV. 맺는말

I. 소비자신용의 기능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내지 용역)을 만들어내고, 또 이를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새로운 상품은 기술의 진보나 대량생산 등을 통해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역으로 새로운 기능과 편익이 부가되어 종래의 것보다 가격이 상승된 상품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기존에는 소수의 사용자만이 존재했던 상품이 소득수준의 향상 등의 이유로 사회의 전반적인 사용물로 기능하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이 상품의 대가로서 지출해야하는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득대비 지출액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품의 가격이 소득액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미리 저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가 불가능하거나, 소득액이 한정되어 새로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는 저가의 한정된 소비재만

* 심사위원 : 이상욱, 정봉진, 엄미경

투고일자 : 2008. 7. 20, 심사일자 : 2008. 8. 29, 게재확정일자 : 2008. 9. 1.

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국민경제의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서는 고가의 내구재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비록 당장에 판매상품의 대가(전액)를 회수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라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면 소비자는 새로운 물품을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서는 구매력의 안정을 가져와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가 바로 소비자신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신용은 현대사회의 경제구조 아래에서 소비자의 구매력확대와 소비촉진을 유도하여 경제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비자신용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신용판매회사·제조업자 및 상인이 상품이나 용역 또는 화폐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는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이것에 대한 지급의 이행을 약속받는 상호신뢰를 배경으로 행하는 교환수단”¹⁾ 또는 “금융기관이나 상인 등이 최종소비자에 대하여 소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거나 매매대금의 지급유예를 통하여 신용을 제공하고 장래에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이를 회수하는 방법”²⁾이라고 이해된다.

그런데 소비자신용은 생산자신용과는 달리 그 신용액수도 적고 단기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취급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소비자신용을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貸主보다 借主인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가 열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부당한 신용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 세계 각국에서는 소비자신용의 적정한 규율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기 시작하였고,³⁾ 그 중의 하나가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제이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제의 변천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소비자신용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본 논문은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에서 발표한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제의 입법현황과 시사점”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1) 박무송, 소비자금융과 신용, 행림출판사, 1988, 15면(이호영, 소비자신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각주 3에서 재인용; 각주 3에서는 서명을 “소비자금융과 금융”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자금융과 신용”의 오타임).

2) 신원득/박인섭, 소비자신용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5면.

3) 예컨대 미국의 Uniform Consumer Credit Code 혹은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EU에서의 소비자신용법제에 관한 지침 등.

II. 상품의 판매와 결합된 소비자신용

1.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제

1) 소비자신용법 제정이전⁴⁾

독일에서는 19세기 중반의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생산 된 제품, 특히 재봉틀이나 가구, 자동차 등 고가의 소비재에 대한 매매에 할부거래의 방식이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870년대 이후 널리 퍼지게 된 이러한 할부거래는 매도인신용제공형 할부거래라 할 수 있는데, 매수인은 판매자의 자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용을 제공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⁵⁾ 1920년대에는 매도인신용제공형 할부거래를 넘어서는 제3자신용제공형 할부거래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매매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상품의 구입자금을 융자하여주는 형태를 띤다.⁶⁾ 따라서 독일에서는 할부거래의 형태가 단순한 할부거래(einfaches Abzahlungsgeschäft)에서 출발하여 금융적 할부거래(finanziertes Abzahlungsgeschäft)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할부거래는 그 유용성과 더불어 폐해도 나타나게 되어 할부가격이 현금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거나, 판매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또 소비자가 할부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제품을 구입한다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할부계약 체결시에 계약서의 사본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가혹한 제재가 가해진다거나,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4) 양창수, 서독 소비자신용법제의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 133면 이하 참조.

5) 이 경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첫째, 매수인이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이미 매수인에게 인도된 제품을 어떻게 반환받을 것인가와 둘째, 그 제품이 매수인으로부터 선의의 제3자에게 인도되거나 담보로 제공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등장한다.

6) 제3자신용제공형 할부거래는 할부금융회사가 상품구입권(Kaufgutschein)을 발행하는 형태와 금융기관이 매도인의 보증하에 매수인에게 상품구입대금을 대출하여 주는 경우, 그리고 어음이 발행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이는 금융기관에 의한 화폐신용(Geldkredit)으로써, 앞서본 매도인신용제공형 할부거래가 상품신용(Warenkredit)임과 대비된다. 제3자신용제공형 할부거래는 독일에서 제2차 대전 이후에도 성행하여 1950년대 할부금융을 통한 대출총액이 소비자신용을 위한 대출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법원의 전속관할을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할부거래와 관련된 이러한 폐해에 대응하여 독일에서는 1894년에 할부거래법(Gesetz betreffend die Abzahlungsgeschäfte; AbzG)이 제정되었다.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인 매수인이 할부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계약해제와 이미 수령한 금부의 반환, 위약금조항, 기한이익상실조항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할부거래법은 1969년, 1974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다가 1990년에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 kreditgesetz; VerbrKrG)이 제정되면서 이에 흡수되었다.

상품의 판매와 결합된 소비자신용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은 할부거래법이나 소비자신용법 이외에도 1977년부터 시행된 약관의 규율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AGBG)과 1986년부터 시행된 방문판매 및 그 유사거래의 철회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Widerruf von Haustürgeschäften und ähnlichen Geschäften) 등이 있었다. 이는 다수의 소비자신용거래가 판매자의 의도대로 만든 약관조항에 의해 규율을 받는 점 내지 방문판매와 신용거래가 결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있다.

2) 소비자신용법

(1) 소비자신용법의 제정배경

시대가 변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독일의 입법자들은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등과 같은 개별적인 법만을 가지고 소비자신용을 규율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 1986년에 제정된 EU의 소비자신용법제에 관한 지침⁷⁾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였던 독일의 입법자는 1990년에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 kreditgesetz)을 제정하였다.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은 소비자신용의 모든 유형을 망라하여 적용되는 법률로서, 기존의 개별적 규제방식을 포기하고 포괄적 규제방식을 적용하였다.

7) Richtlinie 87/102/EWG des Rates vom 22. Dezember 1986 zur Angleich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en Verbraucherkredit, ABl. L 42 vom 12. 02. 1987, Berichtigung ABl. L 278 vom 11. 10. 1988.

(2) 소비자신용법의 내용

독일의 소비자신용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신용계약을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소비대차, 지불유예 혹은 기타의 金融扶助의 형태로 有償의 신용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소비자신용법의 적용범위는 신용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용계약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고 소비자에게 신용을 알선하거나 소비자에게 신용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소개하는 것(제1조 제3항)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알선계약으로까지 확대되었다(제1조 제1항). 그리하여 독일의 소비자신용법은 신용제공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신용알선에 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도 가지게 되었다.

소비자신용법의 주요내용은 제4조에서 신용계약이 순신용액, 할부금 총액, 신용상환방식, 실질연이율, 보험비용 등이 기재된 서면형식(schriftliche Form)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1호), 신용제공자는 그 등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4조 제3항). 할부매매의 경우에는 현금가격, 할부가격, 개별할부금의 액수 및 이행기, 실질연이율, 보험비용 등을 기재한 서면형식을 갖추어야 한다(제4조 제1항 제2호). 다만 계좌대월신용(제5조 제1항)이나 통신판매(Versandhandel 제8조 제1항)의 경우에는 서면형식이 강제되지 않는다.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후 1주일간의 철회권(Widerrufsrecht) 행사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며(제1항), 발신주의를 취한다(제2항). 또한 이 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단축할 수 없다(제18조 참조).

신용계약이 소비자의 상품구입 등의 대금조달에 기여하고, 신용제공자가 신용계약의 준비 또는 체결에 있어 매도인의 협력을 이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매매계약과 신용계약이 경제적 일체로 평가되는 결합매매계약의 경우 당해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대항사유에 기하여 소비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는 신용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제9조 제3항).

제11조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가 그의 신용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 그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독일연방은행이 정한 할인율(Diskontsatz)에 5%를 가한 이율로 이자가 부가된다. 신용제공자나 소비자는 이에 대하여 반증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기한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자 등이 감액된다(제14조).

소비자신용법은 또한 제12조에서 할부신용(Teilzahlungskrediten)에 있어서 기한이익의 상실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는 신용제공자가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18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부과된 약정은 무효임을 규정한다.

2. 우리나라의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본바와 같은 소비자신용법제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나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신용거래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즉 독일의 예전 법제와 마찬가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혹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한다. 이밖에도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상품의 판매와 결합된 소비자신용을 규율하는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대해 살펴보고, 현금금융을 통한 소비자신용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논의한다.

1)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제정배경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와 더불어 1960년대에 할부판매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또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할부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논의되다가 1986년에 도·소매업진흥법에 할부매매를 행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몇 개의 조문을 도입하였다.⁸⁾ 그러다가 할부거래에 있어 제기되는 각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⁹⁾

방문판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판매방법으로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습득하거나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판매원들이 소비자로서 하여금 억지로 물건을 구입하도록 강요

8)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181면.

9) 일부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4호, 시행일 2008. 9. 29.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판매자의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애프터서비스나 상품의 교환 등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단점이 존재한다.¹⁰⁾ 그리하여 1991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¹¹⁾

양 법률에서는 소비자인 매수인이 할부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할부거래법 제3조, 방문판매법 제7조 제1항, 제16조, 제28조), 중요사항에 대한 서면작성의무 내지 서면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할부거래법 제4조 제1항·제3항, 방문판매법 제7조 제2항, 제16조, 제28조). 또한 매수인의 항변권이나 할부금의 기한전 지급, 매도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에 관하여도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1조, 제9조).

2) 철회권의 내용과 문제점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충동구매나 비합리적인 구매결정으로부터 소비자인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숙고기간 내지 냉각기간(Cooling off)을 부여하여 할부거래법상으로는 7일(제5조 제1항), 방문판매법 상으로는 14일(제8조, 제17조)의 철회권 행사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구매결정을 하거나 교묘하게 상품구매를 부추기는 판매원들의 요청에 의해 상품구매를 결정하게 되는 소비자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철회권 행사기간을 14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방문판매와 할부거래의 형태가 결합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법 규정상의 철회권 행사가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행한 구매계약에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하게 철회권 행사기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철회권 행사의 제한이 가해지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4조와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렇

10) 김시월,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법의 개요, 275면 이하.

11) 일부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호.

듯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도 어떤 경우는 전체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반면, 어떤 경우는 법률에 규정되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양 법 모두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할부거래법 제5조 제4항,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1호¹²⁾)”와 “소비자의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할부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제4조 제1호 가목~사목)에서는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목적물을 열거하면서 선박, 항공기,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날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컨대 항공기,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즉 철도용 차량, 건설기계는 일반적인 (내구용)소비재라고 할 수 없으며, 대개 매수인이 商行為를 목적으로 구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할부거래법 제2조 제2항) 철회권 행사제한규정의 의미가 희석된다. 그리고 냉장고가(철회권의 행사기간인 7일 동안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목적물인지의 여부도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 밖에 날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는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목적물이라기보다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4호와 같이 “복제가 가능한 재화”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3. 시사점

독일의 경우 할부거래법(*Abzahlungsgesetz*)은 이미 독일민법(BGB)이 제정되기 전인 1894년에 제정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구매력 증진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할부거래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할부거래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독일은 이미 개별법률에 의한 법적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또한 EU의 입법형식을 받아들여 포괄적인 소비자신용법제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제정된 것이 약 20여년에 지나

12)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는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으나 할부거래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할부거래법에도 당연히 규정되어야 내용이라고 본다.

지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규정들, 예컨대 서면주의나 계약서 교부의무, 철회권, 매수인의 항변권 등과 관련된 규정은 모두 담고 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할부거래와 방문판매의 경제적인 의미가 변화하고, 할부거래와 방문판매의 형식이 결합된 예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달라지고 구매방식도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즉 예전에는 할부대금을 대부분 현금의 직접지불이나 지로를 통해 지불하였던 것에 반해, 현재에는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거래방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의 방문판매는 줄어드는 대신 전화권유판매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상품의 판매와 결합된 소비자신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규정방식을 고려하여 볼만하다. 즉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합하여 규율하는 방식도 고려할만 하다. 특히 앞서 본바와 같이 철회권의 행사기간이 적용법에 따라 달라진대거나, 철회권 행사의 제한사유 등에 불일치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법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하여 예컨대 어떤 소비자는 구매후 열흘이 지난 다음에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어떤 소비자는 열흘 후의 철회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철회권의 행사와 관련된 혼동을 줄이고, 시대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도 법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III. 현금금융을 통한 소비자신용

앞서 본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신용은 그것이 판매자에 의한 것이건 혹은 제3자에 의한 것이건 간에 특정한 상품거래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특정한 상품이나 그 상품의 판매자와는 분리된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발달한 것이 현금금융을 통한 소비자신용제도이다.

1. 독일의 현금신용제도

1) 독일의 현금신용제도의 발전

독일의 현금신용(Barkredit)제도는 1950년대 말에 등장한 개인용 소액신용(persönliches Kleinkredit)제도로부터 출발한다. 개인용 소액신용(persönliches Kleinkredit)제도는 독일연방 각주 은행감독관청의 규제에 의해 독일의 은행들이 2천 마르크(DM)까지의 자금을 6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기간으로 대출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대출조건은 1960년대 초부터 꾸준히 확장되었다.¹³⁾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일반 근로자의 급료가 은행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되었고, 따라서 그 급료자체를 담보로 하여 즉시 현금인출 등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에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던 방식으로부터 計座貸越契約(Überziehungsvertrag)에 의해 대출액에 상한이 있기는 하나 수시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당좌대월방식이 한단계 더 진화하여 1968년부터는 수표카드(Scheckkarte)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수표카드를 사용하여 상품 대금을 수표로 지급하고, 은행은 고객이 발행한 수표의 지급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한다.¹⁴⁾

근래에 널리 통용되는 신용카드(Kreditkarte) 역시 총괄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신용카드거래를 통해 신용거래의 목적물은 상품뿐만이 아니라 용역에도 미치게 되었고, 소비자신용의 대상물은 고가의 소비재뿐만 아니라 일반상품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할부금융신용이나 소액신용은 대개 곤궁한 이용자가 평생 동안 채무를 부담하거나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30%의 신용차입자는 그들의 빚을 借換(Umschuldung)하였고,¹⁵⁾ 독일 가구 전체의 약 48% 정도가 소비자신용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1980년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가구의 평균 소비자신용액이 1만 마르크(DM)에 이르고, 1인당 평균소득액 대비 1인당 평균 채무의 비율이 1950년에는 0.2%였다가 1980년에는 10.9%로 증가하였다.¹⁶⁾ 이에따라 은

13) 양창수, 서독 소비자신용법제의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 138면 이하 참조.

14) 앞서 본 개인용 소액신용제도(persönliches Kleinkredit)가 대출기간동안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함에 반하여 계좌대월이나 수표카드 형태의 소비자신용은 금융기관에 설정된 예금계좌에 입금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동적으로 차용금이 반환되는 비분할변제 내지 총괄결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15) Hörmann/Holzschek, Rechtstatsachen zum Konsumentencredit, ZIP 1982, S. 1172.

16) Hörmann/Holzschek, Rechtstatsachen zum Konsumentencredit, ZIP 1982, S. 1173.

행을 통한 소비자신용의 총액은 1950년에는 1억8천만 마르크(DM)에서 1980년에는 1천3백억 마르크(DM)로 늘어났다.¹⁷⁾

2) 독일 민법상 소비자의 소비대차계약

1990년 12월 17일 제정된 소비자신용법(Verbraucherkreditgesetz)은 1993년 4월 27일¹⁸⁾, 1996년 12월 20일¹⁹⁾, 2001년 7월 13일²⁰⁾ 개정되었다가, 2001년 11월 26일 제정된 “채권법현대화법”²¹⁾에 의해 독일 민법 제491조 이하와 제655조a 이하로 수용되었다.

독일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의 개념과 당사자의 의무는 제488조에서, 借主의 해지권은 제489조에서, 특별한 해지권은 제48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소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제491조에서 제498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 제499조에서 제504조까지는 지불유예(Zahlungsaufschub)나 금융리스계약(Finanzierungsleasingvertrag) 혹은 할부거래(Teilzahlungsgeschäft)와 같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金融扶助(Finanzierungshilfe)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505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할공급계약(Ratenlieferungsvertrag)을 규정하고 있다. 제506조에서는 제491조에서 제505조까지의 규정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다른 약정을 금지하여 이들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나타내고 있다.

(1) 적용범위

제49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소비대차는 貸主가 사업자이며 借主가 소비자인 경우에 해당된다. 그런데 제507조에서는 차주가 제13조의 정의규정에서 말하는 소비자에 속하지 않는 창업자(Existenzgründer)에게도 제491조 내지 제506조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창업자에게 제공된 순소비대차액

17) Staudinger/Kessal-Wulf(2004) Einl zu §§ 491ff. Rn. 6.

18) BGBl. I 509.

19) BGBl. I 2154.

20) BGBl. I 1542.

21) BGBl. I 3138.

(Nettodarlehensbetrag)이나 현금가격이 5만 유로(Euro)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원금이 2백 유로(Euro) 미만이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시장 이자율에 미치지 않는 이자율로 정한 소비대차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소비대차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491조 제2항). 또한 채판상의 조서나 공증에 의한 경우(제491조 제3항 제1호), 그리고 유가증권, 외국통화, 금융파생상품(Derivaten) 혹은 귀금속의 취득을 위한 경우(제491조 제3항 제2호)에는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서면형식

소비대차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분리되어 서면으로 작성되어도 무방하다(제492조 제1항). 서면상에 표시되어야 하는 중요 사항은 순소비대차액, 상환의 방법, 이자율 등이 있다(제492조 제1항 제1호~제7호). 서면형식을 따르지 않은 소비자의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다(제494조 제1항).

(3) 철회권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의 차주는 독일민법 제355조의 규정에 따른 철회권(Widerrufsrecht)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주간의 철회권 행사기간이 보장된다(제495조). 이는 1주일간의 철회권 행사기간이 규정되었던 예전의 소비자신용법 제7조 제1항에서보다 소비자의 보호가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계좌대월신용(Überziehungskredit)

제493조에서는 計座貸越契約를 통한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용기관은 차주에 대하여 소비대차의 개시전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의 내용은 ① 소비대차의 최고한도액, ② 통지 당시 적용되는 연이율, ③ 이율이 변경될 수 있는 조건, ④ 계약의 종료규정이다.

(5) 대항사유의 포기

제496조에 따르면 차주가 대주에 대하여 가지는 대항사유를 채권양수인에게 주장하거나 채권을 상계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제1항). 차주가 대주에 대하여 어음이나 수표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주는 차주가 그러한 어음 또는 수표의 교부로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2항).

(6) 지연이자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상의 차주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이자의 지급은 제288조의 규정에 따른다(제497조 제1항 제1문). 독일민법 제246조에 의하면 법정이자의 이율은 4%로 규정되어 있다. 이밖에 “채권법현대화법”에 의하여 새롭게 제정된 제247조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정하는 기준이율(Basiszinssatz)이 규정되어 있다. 법 제정당시는 3.62%였으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변경을 거듭하였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3.19%로 정해져 있다.²²⁾

이 기준이율은 지연이자(Verzugszinsen)를 규정한 제288조의 기준이율이 된다. 제288조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지연이율은 기준이율에 연 5%가 더해지고(제1항), 소비자가 당사자가 아닌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기준이율에 8%가 더해지므

22) 독일민법(BGB) 제247조에 따른 기준이율

이율	적용기간
3,19 %	2008년 7월 1일부터
3,32 %	2008년 1월 1일부터
3,19 %	2007년 7월 1일부터
2,70 %	2007년 1월 1일부터
1,95 %	2006년 7월 1일부터
1,37 %	2006년 1월 1일부터
1,17 %	2005년 7월 1일부터
1,21 %	2005년 1월 1일부터
1,13 %	2004년 7월 1일부터
1,14 %	2004년 1월 1일부터
1,22 %	2003년 7월 1일부터
1,97 %	2003년 1월 1일부터
2,47 %	2002년 7월 1일부터

로(제2항) 결국 2008년 10월 현재 금전채무의 지연이자율은 8.19%가 되고, 상인간의 지연이자율은 11.19%가 된다. 그 밖에도 채권자는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기하여 이보다 높은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제3항), 그 이외의 손해도 주장할 수 있다(제4항).

금전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는 지체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소송이 계속된 때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채무의 이행기가 그 후에 비로소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행기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91조). 소송계속시의 이자율(Rechtshängigkeitszins)을 정한 제291조도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앞서본 바와 같이 2008년 10월 현재 지연이자율은 기준이율(Basiszinssatz) 3.19%에 5%가 부가되어 8.19%가 된다. 다만 부동산소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기준이율(Basiszinssatz)에 2.5%가 부가되어(제497조 제1항 제1문 단서 및 제2문) 5.69%가 된다. 구체적인 경우에 대주가 상기의 지연이율보다 높은 손해를 입증하거나, 차주가 그보다 적은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가능하다(제497조 제1항 제3문).

(7) 일부금부의 변제충당

이행기에 도달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차주의 상황은 우선적으로는 관련비용의 충당에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원금에, 마지막으로서는 이자의 충당에 사용한다. 대주는 차주의 일부금부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제497조 제3항). 이 규정은 부동산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497조 제4항).

(8) 할부소비대차에 있어서의 기한이익의 상실

할부로 상환하는 소비자소비대차계약의 경우에 차주가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하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①차주가 최소한 연속하는 2회의 할부금을 전부 혹은 일부 지체하고 또한 최소한 10%를 지체하였거나, 3년 이상 기간의 소비자소비대차계약에서는 소비대차 액면금 또는 할부금의 5%를 지체한 경우 ②대주가 차주에게 2주일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잔액 전부를 청구할 것임을 밝히고 그 지체액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

대주는 차주에게 늦어도 상기의 최고시에 합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여야 한다(제498조 제1항). 이 규정 역시 부동산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498조 제3항).

(9) 소비대차알선계약

소비대차알선계약이란 어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가를 받고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하거나 그에게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제655a조). 소비대차알선계약 역시 서면형식을 갖추어야 하며(제655b조), 소비자는 소비대차알선자의 알선 또는 소개로 인하여 소비대차가 소비자에게 현실적으로 행하여지고 소비자의 철회권의 행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만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55c조). 상기의 보수 이외에 다른 대가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없으나, 소비대차알선자가 지출한 필요비에 대한 약정은 가능하다(제655d조). 소비대차알선계약의 강행규정성과 창업자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는 앞서의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규정의 내용과 동일하다(제655e조).

3) 독일 민법상 약정이율 규정

약정이자에 대해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율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지나치게 과도한 이자의 약정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위반이나 폭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일반조항인 제138조가 적용된다. 독일의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약정된 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지의 여부는 특히 자본시장의 상황과 위험분배의 관점에서 개별적 사례에 따라 판단한다.²³⁾

예전에 독일민법에서는 6%를 초과하는 이자율의 약정은 계약체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6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는 규정(삭제전의 독일민법 제247조)을 두었으나, 거래의 실제에서 6% 이상의 금리가 일반화되고, 법 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안정적인 금융을 원하는 채무자의 이익을 해할 수

23) MünchKomm-Mayer-Maly, § 138 BGB Rn. 120; Larenz, SchuldR AT, S. 181; 35%의 이자율 KG BB 1974, 1505; 40%의 이자율 OLG Nürnberg MDR 1976, 399; KG Berlin 1985, 829(백태승,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 고시연구(98. 9), 41면에서 재인용).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87년에 폐지되었다.²⁴⁾

이밖에 독일민법 제248조에 따르면 저축은행, 신용기관 및 은행영업주에 대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행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사전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다.

2. 우리나라의 소비자현금신용

1)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에 고리대부가 존재하였고 따라서 이를 규제하는 규정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며,²⁵⁾ 현대의 법규로는 일제시대에 제정되었던 利息制限令을 갈음하여 1962년에 제정된 이자제한법이 그 효시로 일컬어지고 있다.

법제정시의 최고이율은 연 2할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것이 현실의 경제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1965년 개정을 통해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대통령령 규정상의 최고이자율은 최저 연 2할5분에서 최고 연 4할까지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였다.²⁶⁾

1997년 말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998년 1월에 이자제한법이 폐지²⁷⁾되었다가 이로 인한 각종의 폐해가 드러나자 최고 연 66% 이자율의 규정을 가진 대부업법을 2002년에 제정하였고, 이 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커지자 2007년 이자제한법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24) 백태승,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 고시연구(98. 9), 41면.

25) 어인의, 이자규제의 변천과 이자제한법,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 민법전 시행 30주년 기념논문집, 473면 이하(백태승, 이자제한법의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 고시연구, 41면에서 재인용).

26) 백태승, 이자제한법의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 42면.

27) 그 이유는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지원의 조건으로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고 고금리정책을 위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김대정, 현행법상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314면 각주 2). 최고이자율의 제한이 없어져야 높은 이율을 추구하는 외국의 자본을 국내로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안영석, 금융위기극복을 위한 당면과제, 국회보 1981.1, 국회사무처, 127면(어인의, 이자제한법 부활론과 “대금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277면 이하에서 재인용).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2조 제1항)하고 있고, 이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정해져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²⁸⁾).

2)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변제한 채무자의 권리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환한 경우 채권자는 그 부분을 취득할 법률상의 원인이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과거의 판례는 일관되게 채무자의 반환청구를 부인하였다.²⁹⁾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지지하는 견해는 민법 제746조 본문에 의거하여 임의로 지급된 초과이자자는 불법원인급여가 되고, 그 불법원인이 당사자 쌍방에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부인한다.³⁰⁾ 반면 채무자의 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견해는 민법 제746조 단서를 근거로 불법의 원인이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반환청구를 인정하거나,³¹⁾ 부당이득을 근거로 반환청구를 인정하거나³²⁾ 혹은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솔·무경험·궁박을 이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4조의 폭리행위에 해당되어 민법 제746조 단서가 적용되므로 채무자의 반환청구를 인정³³⁾하였다.³⁴⁾

그런데 2007년에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제2조 제4항에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조에서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

28) 제정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

29) 대판 1959. 9. 10. 4292민상249; 대판 1959. 12. 31. 4291민상802; 대판 1960. 6. 30. 4292민상838; 대판 1961. 7. 20. 4293민상617.

30) 김증한, 채권총론(1988), 37면; 김현태, 신채권법총론(1964), 67면; 현승종, 채권총론(1964), 75면.

31) 박윤직, 채권총론(1994), 72면.

32) 이태재, 채권총론(1981), 97면.

33) 배기원, 이자제한법 제2조, 사법논집 제5집, 569면.

34) 강현중, (주식)민법, 채권총칙(3), 민법 제479조, 283면 이하.

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상으로는 이자제한법과 같은 원본충당조항은 없으나 “채무자가 그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3항).

3)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과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의 관계

그런데 이자제한법상으로는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현재 30%)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2조 제3항), 현행 대부업법상으로는 49%의 이자를 부과(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3항)할 수 있기 때문에 30%는 초과하지만 49%에 미치지 않는 회색지대의 이자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7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대부업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말의 경제위기 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자 초고금리를 설정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가 횡행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 대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법을 제정한 것이 대부업법의 제정배경이라고 할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지하경제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채업자를 등록에 의해 양성화하기 위함이었다.³⁵⁾ 따라서 원래 법 제정시에는 최고이자율 규정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3년간만 효력을 가지는 것(부칙 제2조 제1항)으로 하였다가, 2005년 개정시에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이러한 법의 연혁을 살펴보면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되기 전에는 대부업법의 이자제한 규정이 유일한 규정으로서 기능을 하였고 2005년 법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제한규정의 효력을 연장할 때에도 법률규정상의 불일치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2007년에 새롭게 이자제한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자율 규정의 괴리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에 맞추는 개정대신 이자제한법 제7조와 같은 특례규정을 두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자제한법과 일치하지 않는 (더 고율의)최고이자율을 대부업법에서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합법적으로 더 고율의 이자를 징수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그리하

35) 김대정, 현행법상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324면.

여 그 업체들을 정부의 감시·감독하에 두고자하는 의도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의 특혜가 원금의 몇 배에 이르는 이자율을 책정하는 미등록 대부업자를 유인하기에 충분한지의 의문이 있다. 또한 초고율의 이자율을 책정하고 불법적인 추심을 행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상·행정상의 제재나 민사상의 무효판결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는 앞서 말한 정부의 의도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현행 대부업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효력이 만료하는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과 일치시키는 개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3. 현금신용과 관련된 문제

1) 독일에서 소비자신용에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소비자신용법제의 규율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소비자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강조하여 과도한 규제와 감독을 비판하는 입장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로 인해 사무처리비용이 증가하고, 따라서 대출비용도 증가한다고 하는 입장³⁶⁾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더 많은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그 중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계약체결 전에 표시된 (잠정적인)이자율과 실제로 소비자가 지급해야하는 이자율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예를들어 표시상으로는 5.6%의 이율로 소비자신용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이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월 순소득액이 3천 유로(Euro) 이상이 되는 소비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신용계약시의 최종적인 이율은 10.33%에서 13.26%까지로 상승한다.³⁷⁾ 게다가 잔존채무보험(Restschuldversicherung)이 부가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금융비용은 더욱 상승하게 된다. 잔존채무보험이란 채무자의 사망, 질병, 사고 혹은 해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써, 소비자할부신용계약시에 이미 신용제공기관에서

36) Klaus-Heiner Lehne, Börsen-Zeitung(1. 4. 2003) “자금이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37) www.ratenkredit-vergleich.de/service/.

전형적으로 부가판매되고 있으나 실질이자율의 계산에 산입되지는 않고 있다.³⁸⁾ “극단적인 경우 5천 유로(Euro)의 금액에 대한 보험료가 총 836유로(Euro)에 달한다”³⁹⁾고 하며, 그리하여 소비자가 지급해야하는 이자율이 30%에 이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⁴⁰⁾ 잔존채무보험은 고액이면서도 거의 쓸모없는 추가보험이므로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소비자신용이용자가 이미 생명보험이나 직업불능보험(Berufsunfähigkeitsversicherung)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추가이기 때문이다.⁴¹⁾ 또한 종종 잔존채무보험계약을 맺는 보험회사가 은행에 속해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수익은 고스란히 은행에 귀속되고, 따라서 잔존채무보험의 이용은 단지 신용제공기관의 경제적 이익에만 제공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⁴²⁾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두 번째 논의는 “책임있는 신용제공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책임있는 신용제공의 원칙”이란 은행과 리스회사 등은 소비대차계약시에 가장 적절한 유형의 것을 추천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 소비자신용 이용자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결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⁴³⁾ 이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 중 82%는 “은행들이 무책임한 신용정책을 통해 수많은 고객들을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42%의 국민들은 “대출받은 것은 나쁜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⁴⁴⁾ 현재의 추세는 소비자신용의 제공시에 개별적인 상담은 줄어들고 신용위험도를 기준으로 신용제공자가 작성해놓은 신용득점분류방식(Credit Scoring System)을 통해 신용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⁴⁵⁾ 어느 범위와 한도까지의 신용제공

38) 이는 가격표시법(Preisangabenverordnung; PangVO) 제6조 제3항 제5호에 의해 가능하다. 다만 신용제공자가 잔존채무보험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실질이자율에 포함된다.

39) Frank Donovitz, Das 1x1 des Geldes, Stern Ratgeber, Linde Verlag Wien 2004, S. 36.

40) http://www.focus.de/finanzen/banken/kredit/tid-7604/verbraucher Kredite_aid_135188.html

41) Marion und Volker Zwick, Besser Haushalten, ARD-Ratgeber Geld, Köln 2003.

42) Ulrich Krüger, Konto und Kredit, ARD-Ratgeber Geld, Köln 2004, S. 167f.

43) Christine Mai, EU fährt harte Linie bei Kreditregeln, Financial Times Dokumentation(2. 8. 2004).

44) SPIEGEL-Verlag, Soll & Haben 6, 2004, S. 77.

45) 미국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소비자신용평가방식(Fair Issac)의 적용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저당권설정자 10명 중에 한명은 파산에 직면하는데, 그 이유는 지나친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만기가 도래한 이자의 변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책임있는

이 책임있는 신용제공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월 변제액의 가계순소득(Haushaltsnettoeinkommen)에 대한 비율을 조사한 2001년의 통계에 따르면 가계의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가계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변제액의 비율은 낮아진다. 즉 가계순소득액이 3천 유로(Euro) 이상인 경우 변제액의 비율은 11.4%에서 14.5%까지이고, 가계순소득액이 1천5백 유로(Euro)이하인 경우 그 소득의 18%에서 22.8%까지가 변제액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부채를 가진 7%의 가계는 매월 30%이상의 가계순소득을 변제에 사용한다. 참고로 1980년대 중반부터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 가계의 평균저축율은 10%에서 15% 사이에 놓여있다. 따라서 월 변제액의 가계순소득에 대한 비율이 10%에서 15%에 달하는 경우에는 저위험이고, 15%에서 30%까지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으며, 30% 이상이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매우 위험수준의 가계는 채무초과 상태로 판정되어 더 이상의 신용을 제공받지 못한다. 따라서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였고, 신용을 제공 받은 소비자가 결과적으로 채무이행 불가상태에 빠진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독일에서의 논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이자제한법의 제정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는 시장경제에 입각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경제적 약자인 소비금융이용자의 보호 사이에서 발생한다. 즉 한편으로는 이자제한법에서 최고이자율을 규정함으로써 자금시장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며 그에 따라서 사채시장이 위축되어 그나마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길이 막힌다는 점이 지적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자제한의 수단을 써서라도 대다수 소비금융이용자인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한다.

물론 독일에서와 같이 약정 이자율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단지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법감정은 최고이자율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법제와 같은 이중적인 최고이자율 규정은 혼란은 물론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역효과도 낳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신용제공에 대응하여 우선 '약탈적인' 신용제공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다.

넘어서는 약정이자의 강요뿐만 아니라,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크나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대부업자에 대한 형사상·행정상의 제재나 민사상의 무효판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맺는말

앞서 본바와 같이 소비자신용과 관련된 독일의 법제는 19세기 후반에 할부거래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개별법들이 제정되었다가, 단일의 특별법인 소비자신용법으로 흡수되고, 다시 21세기 현재 민법(BGB)의 규정으로 편입되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독일의 현행 법제나 규제기관의 입장은 우리나라의 현재 소비자신용법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즉 우리나라는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법에 의한 규율이 행해지고 있으며, 소비자현금신용과 관련하여서는 최고이자율을 규정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는 이자율이 대부업법에 의해서는 적법하게(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공연하게) 부과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입법화가 이루어진 상품의 판매와 결합된 소비자신용법제는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입법도 고려할 만하다. 현금금융을 통한 소비자신용법제는 독일의 상황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규정으로 통합한 독일의 입법례를 그대로 참고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입법과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이자제한법 내지 대부업법 및 그 시행령상의 경직된 최고이자율 규정으로 인해 자금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독일의 예를 참조하여⁴⁶⁾ 최고이자율이 경제사정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이율에 연동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 소비자신용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46) 물론 독일의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정이율의 연동을 규율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강현중, (주식)민법, 채권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제5판, 법문사, 2005.
- 김경자, 우리나라 소비자신용의 이용실태와 합리화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제 38권 2호, 2000.
- 김대정, 현행법상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9집 제2호, 2007.
- 김성훈, 국내 소비자금융의 발전방안, 아태연구 제9권 제1호, 2002.
- 김시월,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법의 개요, 건대학술지 제41집, 1997.
- 백태승,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법률상의 문제점, 고시연구, 1998. 9.
- 신원득/박인섭, 소비자신용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 90-01, 1990.
- 안경환, 소비자금융의 활성화와 소비자 신용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리의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3·4호, 1988.
- 양창수, 서독 소비자신용법제의 개관, 서울대학교 법학, 제29권 3·4호, 1988.
- 어인의, 이자제한법 부활론과 “대금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안)”, 새올법학 제5권 제2호, 2002.
- 이병준, 독일민법상 소비자계약에서의 철회권과 반환권, 외법논집 제18집, 2005. 2.
- 이종혜, 소비자신용에 관한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 논문집 제17집, 1997.
- 이호영, 소비자신용의 규제에 관한 연구, 육사논문집 제46집, 1994. 6.
- 전광백, 소비자신용의 금리규제에 관한 법리, 연세법학연구 제2권, 1992.
- 한정미,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2권 제1호, 2008.
- Christine Mai, EU fährt harte Linie bei Kreditregeln, Financial Times Dokumentation(2. 8. 2004).
- Focus Money, 38/2004.
- Frank Donovitz, Das 1x1 des Geldes, Stern Ratgeber, Linde Verlag Wien 2004.
- Hörmann/Holzcheck, Rechtstatsachen zum Konsumentenkredit, ZIP 1982.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491-507.

Klaus-Heiner Lehne, Börsen-Zeitung(1. 4. 2003).

Marion und Volker Zwick, Besser Haushalten, ARD-Ratgeber Geld, Köln 2003.

MFI-Zinsstatistik der EZB, Zinsstatistik der Deutschen Bundesbank.

Richtlinie 87/102/EWG des Rates vom 22. Dezember 1986 zur Angleich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en Verbraucherkredit, ABl. L 42 vom 12. 02. 1987, Berichtigung ABl. L 278 vom 11. 10. 1988.

Ulrich Krüger, Konto und Kredit, ARD-Ratgeber Geld, Köln 2004.

[Zusammenfassung]

Gesetze über Verbraucherkredit in Korea und in Deutschland

Sim, Jae-Han

Professor, Yeungnam Universität

Seit Ende des 19. Jahrhundert in Deutschland und seit 60er Jahre in Korea entstanden die Geschäftformen, durch sog. Abzahlungsgeschäfte Warenabsatz zu beschleunigen. Durch diese Abzahlungsgeschäfte konnten Verbraucher (und auch Kleingewerbetreibende) die Ware, wie z.B. Nähmaschinen, Möbel oder Autos kaufen. Trotz positive Funktion des Abzahlungsgeschäfts, gab es viele negative Resultate gegen Verbraucher. Um diese negative Resultate zu vermeiden wurde im Jahr 1894 in Deutschland und im Jahr 1991 in Korea das Abzahlungsgesetz erlassen. Aber mit dem wirtschaftlichen Wachstum kamen Konsumentenkredite in großer Zahl auf und der Gesetzgeber in Deutschland erkannte, dass das Abzahlungsgesetz nur einige besonders gravierende Punkte regelte. Aus diesem Hintergrund versuchte der gesetzgeber in Deutschland eine durchgreifende Neugestaltung des Verbraucherschutzes im Bereich der Konsumentenkredite und im Jahr 1990 erliess das Verbraucherkreditgesetz. Nach diesem Gesetz ist Kreditvertrag ein Vertrag, durch den ein Kreditgeber einem Verbraucher einen entgeltlichen Kredit in Form eines Darlehens, eines Zahlungsaufschubs oder einer sonstigen Finanzierungshilfe gewährt oder zu gewähren verspricht. In Korea gibt es jedoch kein allgemein geltenden Gesetz über Verbraucherkredit, sondern einige individual geltenden Gesetze, wie z.B. das oben genannte Abzahlungsgesetz, das Gesetz über Haustürgeschäft, das Gesetz zur Höchstzinssatzbegrenzung oder das Gesetz über Kleinkreditgeschäft. Mittlerweile wurden in Deutschland die Regelung des

Verbraucherkreditgesetzes durch da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vom 26. 11. 2001 insgesamt in das BGB aufgenommen. In Diesem Aufsatz werden die Regelungen über Verbraucherkredit in Deutschland und in Korea verglichen und damit wird der bessere Weg zum Verbraucherschutz im Bereich des Verbraucherkreditvertrags versucht.

Schlüsselwörter : Verbraucherkreditgesetz, Abzahlungsgesetz, Gesetz über Haustürgeschäft, Gesetz zur Höchstzinssatzbegrenzung, Gesetz über Kleinkreditgeschäft